

투데이 칼럼

김영란법, 청렴시대의 초석 다지다

검찰조직 창설 68년 만에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었고, 논란이 되어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 졌고, 9월 28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청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이다.

부정 청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검찰조직에서 수백억대의 부정한 돈을 주고받아 온 이 나라에서 김영란 법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영란 법에 따르면 3만 원이 넘는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비가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꽤나 구체적인 액수이다.

사실 청렴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오랜 역사동안 강조되어왔음에도 오늘날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이혜리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성과

직설적인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은 더 이상 청렴을 개인의 도덕성이나 양심에 기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법에 정한 선물가액을 맞추다보면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생산량 저하와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하지만 절대를 하지 못하게 해서 쓰러질 경제라면 그만큼 우리 사회

가 부패했다는 뜻이고, 오히려 반드시 이번기회에 바로잡아 대가성 접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헌법소원심판에서 제기되었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의 위배, 양심의 자유와 자기책임원칙 위배 문제는 이번 헌재결정으로 일단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배경

에는 김영란 법이 완전무결하지 않다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부정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하는 레이스를 앞두고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지금,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을 우려한답시고 또 한 번 발을 건다면 우리사회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

오랜 시간 논란이 되어왔던 만큼 이법은 국민의 염원과 관심이 큰 대상이다. 따라서 그 큰 관심과 감시망 속에서 시행 도중 잘못된 점은 개정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어찌던 당연시 여겨왔던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왜곡된 사회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독자제언

휴가 후 차량점검 재정보 이렇게

올 여름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여름휴가를 다녀온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여름휴가 시즌도 거의 끝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바로 차량점검이다.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가족들의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철저한 점검을 하고 떠나겠지만 휴가 후에는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

차량점검은 마치 남의 차처럼 미뤄두고~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사람이 휴식기를 갖는 것처럼 자동차도 피로를 날려버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재정보가 꼭 필요하다.

첫째로 휴미등, 브레이크전구 고장과 같은 각종 램프의 작동상태 및 세차 등 차량정비다.

야간운전시 자동차의 후미등은 내차량의 위치를 다른 차량에게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둘째로 트렁크 정리하기다.

여름휴가를 출발할 때 트렁크에 수많은 생활용품과 음식, 기타 잡화 등을 가득 적재하고 출발했는데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차량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물건들을 그대로 적재하고 운행할 경우, 차량무

게로 인하여 연비가 낮아져 경제적으로 손해이다.

셋째로 타이어 점검이다.

온도차가 큰 여름철에는 타이어의 팽창과 수축차가 커 타이어의 공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차량도 휴가를 통해 장거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타이어의 피로도도 더 높아지고 산악도로와 같은 험한 도로를 주행한 경우에는 하부에 충격과 피도로를 전달하게 된다.

넷째로 휴가철 장시간 운행 후 소모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수명을 늘리고 고장 없이 타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각종 소모품을 적절한 시기에 점검 교환하는 것이다.

자동차마다 소모품 점검 시기는 있으나 장거리 운행 후에는 엔진오일 상태를 점검한 뒤 과부하가 염려된다면 교체해야 한다.

교환을 함으로써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휴가 후 차량점검에 소홀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시민들이 출퇴근 전 자신의 차량을 종종 점검하는 작은 습관을 통해 안전운전을 실천하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박국선 원산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장

독자제언

탈북민의 사회 정착문제 고심해야

북한이탈주민 3만명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 자체도 생소한 언어가 아니며 줄인 말로 탈북민, 흑자는 새터민이라 부ரி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함께하고 있는 게 북한이탈주민이다.

생김새도 비슷하고 속정도 비슷하다. 이웃을 보면 반가이 인사 나누고 정이 많아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거기에다 흠이 많아 콧노래를 부르고 어울려 놀 줄 아는 멋드러진 한민족인이 분명하다.

3.8선이 생기기 전만해도 우리 민족은 한양을 넘어 개성에 다다르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과도 교역을 위해 수시로 넘나들며 단일 영토의 주권을 행사하며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준비가 되어있던 자유 대한민국이었다.

하지만 냉전시대의 남북이념의 차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은 비운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신생어가 쓰여지고 여전히 한민족이라 부르지만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려져 있는 남북분단의 아픔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의 정착문제이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의료, 교육, 주택지원책 등을 마련하였고 경찰조직은 보안협력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탈북민의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우리 국민들이 편히 쉬고 잠자는 이 시간에도 북한의 테러 및 공작은 우리 사회를 언제 어떻게 긴장의 국면으로 만들지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 탈북민 3만명 시대가 도래한 지금, 통일 전단계로서의 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점검하고 반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

탈북민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은 한 개인을 위한 봉사활동이 아님을 우리는 좌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그들의 꺼안고 보듬는 데에는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닌 국가와 국가 간에 화합과 상생을 위한 대인륜적인 국가사업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의식 있는 행동이 더욱 더 필요한 시기인 듯하다.

소일 익산경찰서 본민계 경감

사설

학교 급식 행태가 이래서야 되나

학교 급식 행태가 많이 아니다. 불과 며칠 전에 도내 초등학교 식 품비가 전국 최하위라는 보도였는데 이번엔 또다시 구설수이다. 학교의 영양사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돼야겠다. 급식의 원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영양사들이 멋대로 식재료를 납품 받아 왔다가 이번에 적발됐으니 말이다. 그게 일부 학교들만의 일이라고 애써 축소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학교 급식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거둬 오르고 있음은 도대체가 많이 안 된다.

영양사라면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야 마땅하다. 식재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을 납품받아야 하는데도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것은 영양사의 자질 문제이다.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해야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것은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하기에 충분하기에 하는 말이다.

도내 초등학교 식재료의 구매 단가가 전국 최하위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를 다시 돌아보아야겠다. 구매 단가가 낮다는 게 무엇

을 의미하는 것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학부모라면 누구나 급방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학교 측에서 식재료 구입을 규모 있게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우리 지역 초등학교들이 먹는 식품의 질이 낮다는 이야기가 되니 말이다. 그런데 이번엔 등급이 낮은 고기를 납품받다가 적발됐으니 학교 급식 행태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식재료 구입비가 평균 2350원인데 비해 전북의 경우는 1778원이라 그 격차가 커서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엔 또 등의 수준의 축산물을 납품 받은 채로 급식했다가 적발을 당했으니 말이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그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 마땅하다. 식재료 구입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불쾌하고 등급의 고기가 학생들의 식탁에 오른 것도 그렇다. 정말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발육이 더뎠도 좋단 말인가. 학교 급식 행태와 관련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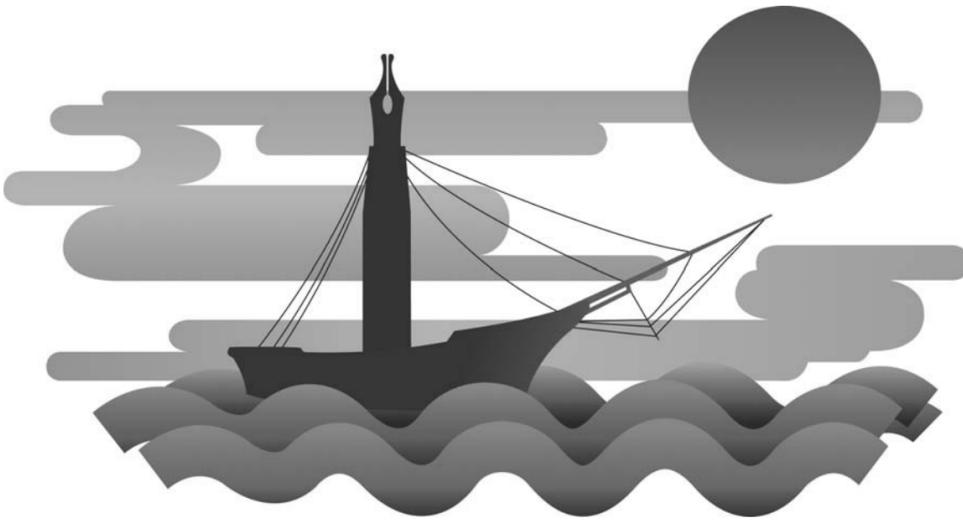
도민의 경제 불행감 여전

도민의 경제 불행감이 여전하다. 정규 일자리가 쪼뼛 창출되지 않고 있는 관에 초등학교 식재료 구입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등의 안 좋은 소식만 들리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그러나 도민의 경제 불행감이 가중되었으면 가중되었지 경감될 턱이 없다. 그래서 전북도에게 물어볼 게 있다. 미래를 약속하던 그 많은 정밀 및 전망을 말이다. 일만 열면 잘 될 거라더니 그게 모두 어디로 가버렸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지난 역대 정부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현실은 더욱 녹록치 않다. 출범할 때 밝은 전망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경제통들의 판단이 달랐던 게 생각난다. 이제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반 쯤 남았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급반전시켜줄 리는 만무하다. 어떻게 해서든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할텐데 현 정부는 긴축 예산 기조로서 전북도가 어지간히 애를 써서서 뜻을 이루기 어려울 터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전북도의 비상한 행보가 있어야겠다.

목도하고 있는 바, 오늘날 우리 전북 지역의 경제 현실은 답답하다. 국가 경제 성장 전망치가 미덥지 않았던 그대로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747이 그랬고 오늘날 박근혜 정부의 474 기대도 한참 빗나가고 있는 날이다. 위정자들은 온갖 약속들을 쏟아내면서 정밀 및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괜한 일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비슷하게 전북도가 말한 것들도 그렇다. 전북도가 간헐적으로 정밀 및 전망을 말했지만 도민들 중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줄 이가 얼마나 될지 의심이 드는 오늘날이다.

오늘날에도 도민의 경제행복지수가 전국의 밑바닥인 것이 유감이다. 무엇인가 달라진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예전 그대로이다. 도내에는 지난 수년간 사흘에 하나 꼴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비극이 있었다. 전북도는 도민의 경제 불행지수를 끌어 내려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 전북도는 그 노력의 결과물을 올 가을이 가기 전에 도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